

2020년 04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8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4 (Vol.58)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5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주찬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행안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필수조례 마련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제주도, 다양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대전시, 안전하고 친환경적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
울산시, 203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착수

7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공모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공사 입찰공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브랜드화 추진

국토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국제공모 12건 선정

국토부, 드론산업 발전 위해 실증도시 3곳,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 선정

부산시, 노후 공업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추진

부산시,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

대전시, 2020년 시민공유공간 조성 사업 본격 추진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과 삶의 질 향상 위한 도시숲 조성 추진

경북도, 경제자유구역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3

국토부,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앱 개발 배포

부산시, 4월부터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가동

충남도, 지적재조사지구 드론 항공영상 구축

충남도, 충남광역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세종시, 세종형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4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행안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필수조례 마련

자치법규과, 2020.04.03.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주택기금과, 2020.04.16.



국토교통부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4.1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축정책과, 2020.04.21.

진행

건축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 ③ 해체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나온 정보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관리법이란?
건축물의 사용까지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전 주소를 검색해 보세요!
<https://blcm.go.kr> ☎ 070-7016-3388-9

건축물관리점검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주기별 점검 주기
정기 점검: 사용중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중간 점검: 사용중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이용시설, 주택 등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공사비용 및 보강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1:1:1
주택 성능보강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연 1.2%, 5년까지 10년 상한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상담 지원, 실태조사, 점검결과 평가 등을 실시합니다.
문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1588-8788
해체비용보상 ☎ 1600-1004

보다 나온 정보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관리법이란?
건축물의 사용까지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전 주소를 검색해 보세요!
<https://blcm.go.kr> ☎ 070-7016-3388-9

건축물관리점검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주기별 점검 주기
정기 점검: 사용중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중간 점검: 사용중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이용시설, 주택 등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공사비용 및 보강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1:1:1
주택 성능보강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연 1.2%, 5년까지 10년 상한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상담 지원, 실태조사, 점검결과 평가 등을 실시합니다.
문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1588-8788
해체비용보상 ☎ 1600-1004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0.04.24.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0. 4. 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
-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 혼합주택단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 지난해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올해 4.24.부터 시행되는 사항
-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제주도, 다양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도시디자인담당과, 2020.04.06.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광고물 등 다변하는 광고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6월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향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문제점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주유소·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제시
- 상업지구내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이 표시가 가능하도록 확대
-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공무 수행 시 공용차량에 외부 전광판을 설치
-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

국토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건설안전과, 2020.04.23.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① 취약분야 집중관리 ② 사업 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③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의 3대 분야와 분야별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목 표	
'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 ('17) 506명 → ('18) 485 → ('19) 428 → ('20) 368 → ('21) 300 → ('22) 250명	
원 칙	
◆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권한과 책임의 균형 확립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적정비용을 보장하되 신상필벌 강화	
혁신분야	분야별 주요과제
취약분야 집중관리	① (민간 건축) 감리자격 강화, 지역건축센터 활성화
	② (기계·장비) 타워크레인 초과정 감시, 작업지침이 배치
	③ (취약공사) 작업허가제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주체별 책임·권한 명확화	④ (발주자) 안전비용 추가 지급, 사고책임 전가방지
	⑤ (시공사) 기업책임 강화, 과징금 현실화
	⑥ (감리) 안전 전담인력 배치, 감리평가 강화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⑦ (제도) 법령 일원화, 안전관리계획 간소화
	⑧ (점검) 국민감시단 운영, 불시점검 일상화
	⑨ (협업) 협의회 활성화, 체험교육 활성화

대전시, 안전하고 친환경적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

생태하천과, 2020.04.14.



대전시는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종합적인 계획

대전시는 이를 통해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시가지 침수 및 제방유실·범람, 농경지 등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사업을 추진해 26개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62.2%까지 달성했으며, 자연재해 피해액 제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진잠천 등 9곳, 10년이 경과한 정생천·금동천·구완천 3개 하천에 대해 추가 용역을 발주해 지난 10일 착수했으며 18개월간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203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착수

녹지공원과, 2020.04.06.



울산시의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

울산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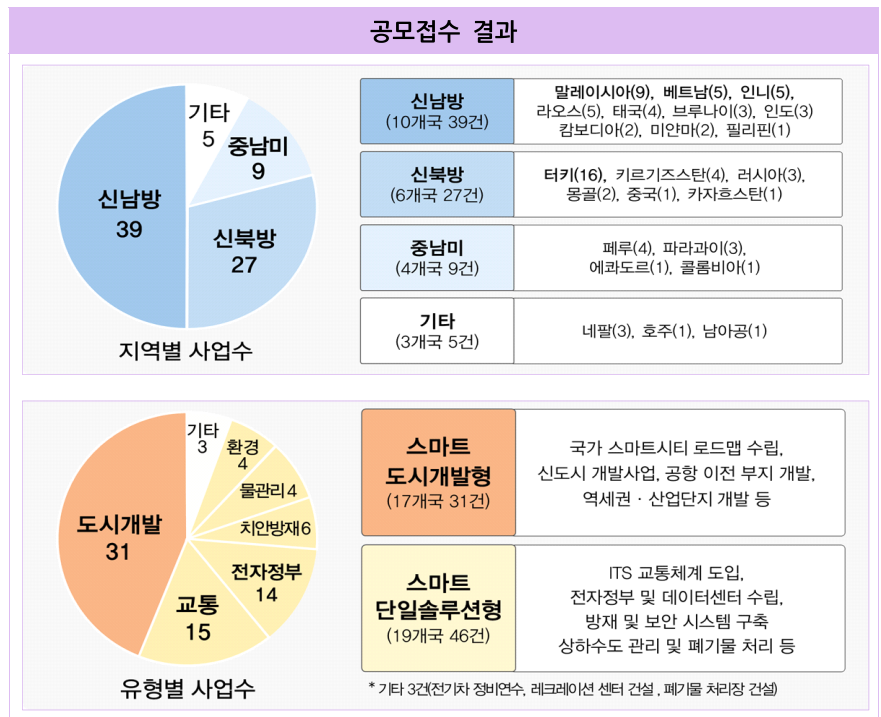
국토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공모

도시정책과, 2020.04.01.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① 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② 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공사 입찰공고

간선도로과, 2020.04.07.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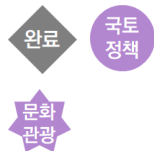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브랜드화 추진

계획총괄과, 2020.04.17.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미래도시 새만금을 브랜드화하고, 국민에게 새만금의 비전과 미래 이미지를 친숙하게 형상화하여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이러브새만금(I♥SAEMANGEUM)’이라는 슬로건과 새만금 대표디자인을 활용하여 새만금을 알릴 계획이다.

새만금의 변화상과 미래상을 국민에게 효과적 알리기 위해서는 새만금 고유의 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올해 초, 새만금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슬로건 제작에 착수했다.



국토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국제공모 12건 선정

도시정책과, 2020.04.19.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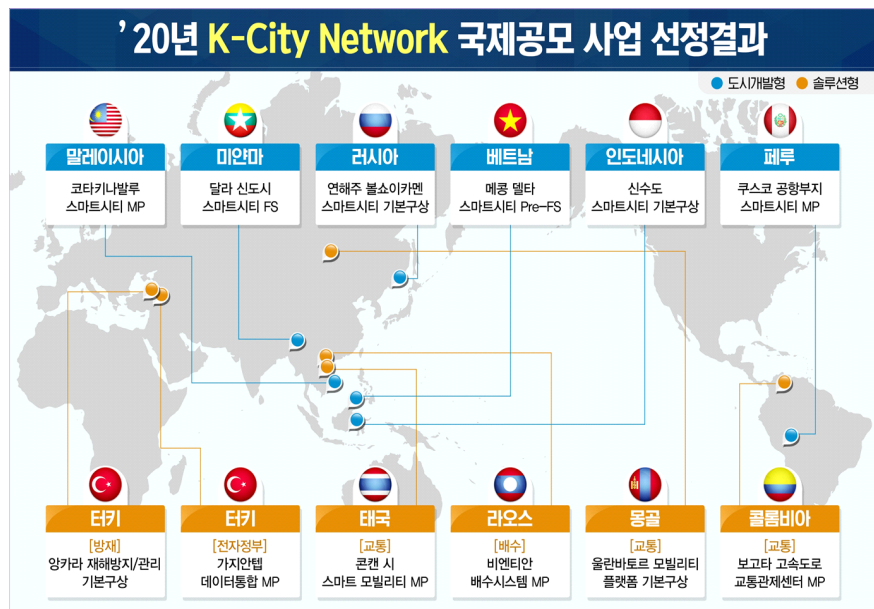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개발형 6건(6개국), 단일 솔루션형 6건(5개국) 등 총 12건(11개국)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23개국 정부, 공공기관이 신청한 80건 중 국내·외 관련기관 의견과 양국 협력관계, 스마트시티 사업 유망성,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도시개발형은 최대 7억원, 단일 솔루션형은 최대 4억원 규모로 연내 마스터플랜(MP) 또는 타당성조사(F/S) 수립과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4~5월 중 해외 정부와 과업범위 조율, 사업별 지원 예산을 확정하고, 6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6월 마스터플랜 또는 타당성 조사 수립을 착수하여 연내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드론산업 발전 위해 실증도시 3곳,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 선정

첨단항공과, 2020.04.21.

완료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 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6월부터 시범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드론 실증도시는 지난해 2개 도시보다 확대된 4개 도시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마다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실증도시 심사 시에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드론 서비스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으로는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정밀제어 짐벌카메라 개발, 드론방호시스템 구축, AI 기반 사물인식 기술, 조난자 소리 감지 드론개발 등을 실증할 13개 드론기업에게 기술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노후 공업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추진

도시계획과, 2020.04.09.

진행

도시
정책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상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를 ‘입지 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비롯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략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이는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 지역 현황과 입지조건을 반영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시,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

주택정책과, 2020.0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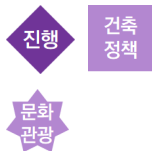
부산시는 이웃 간 소통하며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① 자연과 함께 건강한 주거공간 만들기 ② 정다운 수정아파트 이웃 만들기 ③ 친환경실천사업 ④ 반짝반짝 야시장 놀장 놀이터 개장 ⑤ 시와 나눔이 있는 아파트 이웃 공동체 ⑥ 해설이 있는 클래식음악회 등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친환경, 문화·교양강좌, 주민화합, 정서공감, 소통 사업 등 단지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했다.

대전시, 2020년 시민공유공간 조성 사업 본격 추진

공동체정책과, 2020.04.06.



대전시는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사랑방인 ‘시민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곳의 시민공유공간이 공유부엌, 마을카페, 마을공방, 마을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돼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조성된 주민자치형(민간) 11곳의 공간을 개방성, 확장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평가를 통해 지원 할 예정이다. 신규로 조성될 공유공간은 주민자치형과 공공형(공공시설 유희공간), 빈집 정비를 통한 주민공간 조성 등 마을공간의 유형을 다양화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시설조성비와 사업운영비 등으로 최대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되지만, 공동체 스스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공공형을 제외한 주민자치형은 보조금의 5%를 자부담해야 한다.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과 삶의 질 향상 위한 도시숲 조성 추진

산림복지과, 2020.04.08.



충북도는 최근 증가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15개소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상반기내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세부 사업별로는 녹색쌈지숲 3개소(0.6ha), 생활환경숲 2개소(2.2ha), 산림공원 1개소(1.5ha), 명상숲 1개소(0.1ha), 가로수 5개소(23.3km), 명품가로숲길 3개소(15km)라고 밝혔다.

도시숲은 여름 한 낮의 평균기온을 3~7℃ 완화시키고,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kg을 흡착·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경북도, 경제자유구역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토지정보과, 2020.04.12.



경상북도는 영천시 경제자유구역 및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2020년 4월 13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영천 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 지구와 인근지역, 경산 지식산업지구(2단계지역)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민의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기준으로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국토부,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앱 개발 배포

시설안전과, 2020.04.02.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4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앱 서비스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건축물, 사면,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안전점검 앱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안전제도 알아보기, 점검요령 동영상 등 안전교육 학습하기, 점검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안전 활동 지원받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 시설* 관리자가 자율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원인 및 보수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시설물안전법 제19조에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점검(4,700건/年)을 무상 실시중

[자율안전점검 사용절차]



부산시, 4월부터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가동

도시계획과, 2020.04.02.

완료

건축
정책

부산시는 구·군 방문 없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까지 모두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이 오늘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 행위허가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로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다.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개발행위허가도 온라인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

충남도, 지적재조사지구 드론 항공영상 구축

토지관리과, 2020.04.12.

완료

국토
정책

충남도가 드론항공측량을 통해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도민 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도는 최근 8개 시·군 22개 사업지구, 1만 3000필지(13km²)에 대한 항공영상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정사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 높이 차이나 기울어짐 등 왜곡이 없어 지적도와 겹쳐 사용할 때 오차가 적은 것이 장점

특히 드론으로 측량할 경우 기존 현황측량에 비해 인력과 비용,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년마다 항공영상을 공급받아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항공영상 수요 증가와 행정업무 적기 활용을 위해 드론을 도입해 행정업무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번 촬영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촬영·제작을 맡았다. 이를 통해 민간 위탁 시 발생하는 용역비용 약 1억 2000만 원을 절감했으며, 도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에도 탑재해 도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충남도, 충남광역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건설정책과, 2020.04.17.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광역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방법·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향후 시군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충남지방경찰청, 119종합 상황실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수배차량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기본 6대 연계서비스를 포함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시, 세종형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스마트도시과, 2020.04.06.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별 업무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자동 수집·분석해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세종형 빅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 오는 7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세종형 빅데이터 허브시스템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주민등록, 어울링, 로컬푸드 등 행정 데이터와 어린이집, 서관 등 각종 시설물 데이터, 유동인구, 카드 매출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망라한다.

세종시는 세종형 빅데이터 허브에 수집된 데이터를 부서 간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 시민 만족도 및 부가가치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빅데이터의 이해를 돕고 중요성, 활용 예시를 담은 ‘생활을 바꾸는 세종형 빅데이터’ 영상을 제작,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